

# 與 “서병수·김태호 ‘낙동강 벨트’ 출마 요청”… 희생론 재점화

장동혁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경남 양산을 탈환 부탁드려 낙동강 벨트 사수, 총선서 큰 의미”

보수텃밭 PK, 이번에는 쉽지 않아서 의원, 요청 수락·김 의원은 아직

4·10 총선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6일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갑)과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낙동강 벨트’ 탈환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지도부 체제의 변화로 사그라들었던 ‘영남권 중진 희생론’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의 서병수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부산 북·강서갑으로 출마해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김태호 의원께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있는 경남 양산을 지역에 출마를 부탁드려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우리 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하는 전략지역들이 있다”며 “정치신인을 내보내시는 이기기 힘든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으면 이기기 힘든 지역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로 가서서 희생해주신다면 그것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고,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남·부산에서 낙동강 벨트가 가장 중요하고, 경남에서 낙동강 벨트 사수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두 분께 당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을 출마해주시는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지’로 분류되는 지역구는 정치신인들에게 물려주고, 경

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힘든 험지에서 도전해달라는 의미다. 현재 부산 부산진갑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는 신성범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장 사무총장은 “두 분 정도면 당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물론 해당 의원들께서 선택할 문제지만, 영남지역에서는 낙동강 벨트가 저희에게 어렵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큰 결단을 해 주실 것

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현재 PK(부산·경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이같은 요청이 나온 배경으로 보인다. PK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지만, 반드시 보수계열 정당 후보만 당선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선 부산 전체 18석 중 5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기도 했다. 경남도 양산과 김해는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도 한다.

거기에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하락 등으로 PK 표심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그리고 서병수·김태호 의원에게 출마를 요청한 지역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에, 이 두 의원이 승리할 경우 전체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셈이다.

서병수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진다. 입장 발표는 7일에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의원은 아직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헌신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민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기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도부의 중진 차출과 ‘헌신’ 요구로 인해, 다시 한 번 ‘영남권 중진 희생론’이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추가로 어떤 분들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부탁을 드릴지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인요한 혁신위’가 ‘천운·중진 희생론’을 제시했을 당시에는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 선언을 했다. 또 하태경 의원의 경우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진들은 기존 지역구를 지켰다. 거기다 대통령실·정부 인사들의 ‘양지 출마 논란’도 있어, 중진들이 불만을 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페널티 부여’를 공천룰로 정한 상태라, ‘공천룰’과 ‘희생론’이 맞물리며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野 “통합형 비례정당, 의총서 만장일치… 4년 전과 달라”

제3정당·주요 정당 함께하는 방향 비례대표 순번, 공정·투명하게 결정 與, 갑작스러운 선거구 확정 논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에 더 많은 몫을 배정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함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결정이 전날(5일) 나왔으며 창당 시기, 후보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증 방식, 소수정당·시민사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당이 빠진 상태이지만 지금은 제3정당과 주요 정당이 합

계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하나 같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당선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이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현 진보연합)과 조준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시켜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킨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나가겠다”며 “비례대표도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공개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시민사회 측과 논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창당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없었느냐는 질문엔 “당내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당과의 논의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여당 측 간사가 연락을 줬다”며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야당과 거꾸로 협상 중단을 통보해오는 상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당 대표께서 어제 준연동형 제도로 (총선을) 치르겠다고는 것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반응이 거칠게 와서 무척 당황스럽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확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선거에 돌입하도록 만들어 드릴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안에 대해 민주당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의의대정원안이 발표됐는데, 지역의사제도,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종합병원 설치이야기가 빠져 있다. 당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尹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

직접 점검회의 주재·이행 상황 챙겨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직접 점검회의를 통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수도권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野 공관위,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2차 발표, 설 연휴 이후 예정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일 총선에서 후보간 경선을 하는 23곳과 단수 공천 받은 13곳을 발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실에서 1차 중앙당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을 거치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를 김영호·문석진, 송파구를 박지현·송기호·홍성룡, 송파구명 남민순·박성수 ▲부산 금정구 김경지·박인영 ▲인천

연수구를 고남석·정일영, 남동구갑 고준수·맹성규 ▲광주 북구갑 조오섭·정준호, 북구를 이형석·전진숙, 동구남구갑 윤영덕·정진욱 예비후보 등으로 총 23곳이다.

단수 공천을 받은 곳은 ▲부산 서구 동구 최형욱, 진구를 이현, 북구강서구를 변성완, 해운대갑 홍순현 ▲대구 달서구를 김성태, 달성군 박형룡 예비후보 등으로 총 13곳이다.

공관위의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될 전망이다. /박태홍 기자